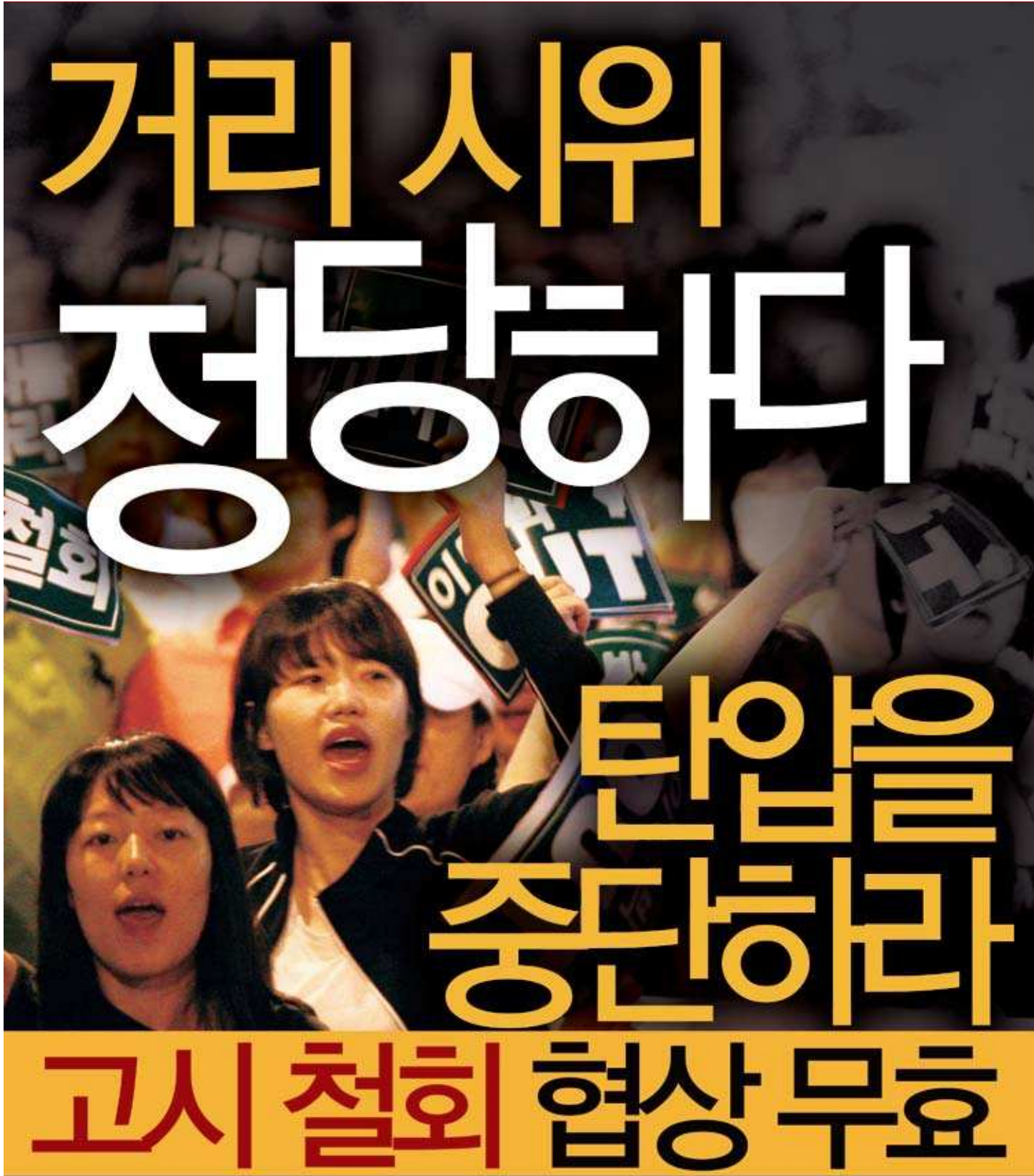




미친 소와  
이명박 OUT 투쟁

- 또 다른 특정위험물질, 한미FTA
- 노동자가 앞장서자
- 대학생 동맹휴업 준비

6, 12면

민주주의는  
왜 교과서에만 있나

7면



살인적 유가 폭등과 저항

5면

다가오는 북한 식량난의 재앙

8면

민영화가 부패의 해결책인가?

8면



프랑스의 우익 정부 반대 투쟁

4면

중국 지진 — 피해를  
악화시킨 공산당의 부패

4면

5.31 국민 무시 이명박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  
오후 4시 30분 대학로 (장소 변동 가능)

촛불 집회는 계속됩니다.  
자세한 이후 일정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웹사이트(http://www.antimadcow.org)를 보십시오.

촛불 집회는 지난 주말(5월 24~25일)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청계광장의 열기는 차고 넘쳐흘러 거리로 분출했다. 한번 시작된 거리 시위는 연일 이어지며 새로운 저항을 북돋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토요일(24일)에 이어 일요일(25일)에도 수천 명이 도심에서 기세등등한 시위를 벌이자, 월요일(26일)에는 촛불집회 참가자 전원이 문화제가 끝난 뒤 촛불을 든 채 거리 시위에 나섰다. 전날 거리 시위를 시작했던 사람들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빌딩 숲 사이로

시위대의 함성이 메아리치자 시민들은 지지를 보냈고, 변화가를 지날 때마다 대열은 시민들의 합류로 늘어났다. 1만여 명으로 시작된 26일 행진은 한때 3만여 명으로까지 불었다. 장관이었다.

거리 시위가 사흘 연속 벌어지자 검찰은 히스테리하게 반응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2년 만에 공안대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했다. 경찰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활동가 10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어떻게 해서든 거리 시위를 가라앉히려 "엄단" 위협을 했다. 그

러나 대담하게도 27일에도 거리 시위는 계속됐다. 대전과 부산에서도 거리 시위가 시작됐다.

저들의 히스테리에는 깊은 위기감이 배어났다.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류근일은 "10년 만의 보수 승리는 불과 백 일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고 한탄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권위 실추", "위기", "회청거림"이란 표현을 쓰며, 정부의 위기가 보수진영 전체의 위기로 파급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3개월 만에 20퍼센트 대로 추락한 것

은 거의 유례 없는 일이다. 흔히 집권 초기 1백 일이 정부의 힘이 가장 센 시기라는데 이명박은 벌써 고개를 숙여야 했고, 그의 시장주의적 개혁은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5월 13일 전 세계에 공개된 국제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78퍼센트가 정부는 "소수의 거대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기업 프렌들리에 대한 대중의 거대한 반감을 짐작할 만하다.

» 3면으로 이어짐

www.counterfire.or.kr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은 우경화하고 있는가?'

일부 국가 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했지만 유럽 전체가 우경화하고 있지는 않다. 독일에서는 급진좌파 정당이 약진하고 있고, 프랑스와 그리스에서는 역동적인 노동자 투쟁이 전개중이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인용해도 될까요?”

“8분간 진행된 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엔 깊은 사과의 정이 배어 있었다.”

－ 이명박의 ‘대국민 선전포고’에 대한 〈중앙일보〉의 독특한 해석

“수입업자들이 나이드 소의 제품을 수입해 팔고자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수입을 고려할 것”

－ ‘한국수입육협의회’ 대표 박창규

“관광 운하, 지구온난화 해결 운하, 4대강 정비 등 계속 명분이 바뀌는데 이러다가 나중에는 ‘남북한긴장완화운하’로 옮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 홍중호 한양대 교수

“참가자들은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사용한 ‘역적’이란 용어까지 써 가며 ‘이명박 타도’를 외쳤다.”

－ 귀신같이 꼬투리 잡는 〈동아일보〉의 솜씨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촛불시위와 관련된 돈을 들이겠느냐. 이는 빨갱이들이 지원하는 것”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박세직

“이것이 더 악화되면 사유재산도 빼앗길지 모른다.”

－ 극우의 조감제의 두려움

“87년 당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명동 성당으로 향한 것이 결국 6월 항쟁으로 이어진 것처럼 다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무서운 상황이 도래한 것”

－ 한홍구 교수

“백성이 자기를 손가락질한다고 백성의 손가락을 잘라 버리는 왕이 있다면 백성들은 팔다리가 모조리 잘라져 절구통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항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 소설가 이외수

“우리가 달래지지 않으니 거슬립니까? 방해가 되니 치워 버리고 싶나요? ... 동등이라도 하나씩 들고 나가 맞서야 정신을 차리실런지”

－ 영화배우 이준기

## 국립대까지 재벌에게 팔아먹겠다고?

강영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료·물·전기·가스뿐 아니라 국립대까지 민영화하려 한다. 이들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국립대 민영화법의 골자는 ‘단위학교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위해 국가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들이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 대학들은 단기간 내 재정 확충을 위해 ‘돈 되는 사업’에 치중할 것이고, 재벌·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대학을 변질시킬 것이다.

이미 정부는 취업률 등의 “객관적 지표”로 대학을 평가하고 재정을 차등 지원하기로 해 대학 구조조정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1만여 명이 참가한 3월 28일 전국 대학생 공동 행동 집회

이로써 각 학교의 ‘경쟁력 없는’ 학과들이 대대적인 퇴출 위기에 놓였다. 동국대는 취업률과 입학성적으로 학과를 평가해 조만간 기초학문 학과들을 폐지할 예정이고 한양대는 독문과를 비인기 학과라는 이유로 통폐합했다.

이명박의 국립대 민영화 법안은 1987년 항쟁으로 쟁취한 대학 내 민주적 요소들도 총장 독재로 바꿔 대학마저도 5공 시절

로 되돌릴 것이다. 국공립대학 노동자들도 효율성 논리에 따라 구조조정 위기에 몰릴 수 있다.

### 등록금 인상

이미 두산 재벌이 중앙대를 1천2백억 원에 인수해 의학, 공학 등 돈 되는 학문에만 투자하기로 했다. 두산은 노골적으로 중앙대를 “삼성의 성공관대”처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성공관대”에서 인문학과 기초과학은 퇴출 위기에 놓였고 강사·교직원들은 ‘노조 무력화 2단계 방안’에 따라 탄압받았다. 등록금 인상에 저항한 학생들을 고려대보다 먼저 출교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1968년 유럽에서의 노동자·학생 반란처럼, 2006년 프랑스 학생들의 비정규직 악법 반대 반란처럼, 2006~2007년 대학을 시장에 내맡기려 한 정부에 맞선 프랑스와 그리스의 학생들처럼 우리도 대규모 거리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미 미친 소수입과 대운하 등에 맞선 청소년, 대학생, 시민들이 4·19, 6월 항쟁을 방불케 하는 반란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의 국립대 민영화 등 대학 시장화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대학생들은, 바로 이 저항과 반란에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 “물 민영화 후 요금이 6백 퍼센트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물산업 자원법’을 입법예고하고 물 민영화를 본격 착수하려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도 1994년 물 민영화로 2년 만에 수도 요금이 6백 퍼센트 인상됐다. 경시대 사회과학연구원의 초청으로 최근 방한한 남아공 ‘반사유화 포럼’ 활동가이자 크와줄루 나탈 대학 시민사회연구소 연구원인 모레피 응도브 씨에게 물 사유화가 가져온 재앙에 대해 들어 봤다.

남아공은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 주택, 전기, 가스, 물 등의 공공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4년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민중에게 자산’이란 기치 하에 집권했습니다.

그러나 ANC는 집권한 후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해 주지 못했고 물·전기·항공·철도 등을 모두 민영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인력 감축이 벌어졌습니다. 공기업 인력 감축은 곧바로 민간기업에도 적용됐습니다. 인력 감축은 흑인, 빈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수입은 급격하게 축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 민영화도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프랑스 물기업 ‘온데온’은 새 수도관

과 계량기를 설치했지만 신선한 물 공급을 원하던 사람들에게 선불 요금을 내고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선불 요금

물 민영화 이후 2년 만에 요금이 6백 퍼센트나 오르자 가난한 사람들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더러운 개울물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1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을 공급받지 못했고, 2천만 명 이상이 물을 찾아 살던 곳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크와줄루 나탈 주에서는 요금 지불 능력이 없는 곳들의 수도가

끊겼고 결국 12만 명 이상이 콜레라에 감염돼 3백 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불제 폐지와 1인 당 매일 50리터의 물 제공이 요구되었습니다.

거대한 저항 때문에 법원은 선불제 등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은 민간기업이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또, 법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법원에서 선불제 폐지가 결정됐다”며 강제로 선불제 미터기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선불제 미터기 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터기를 없애고 물을 즐기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리 최영준

## ‘창조적 야합’으로 끝난 문국현 모델

조명훈

이명박이 끔찍하게 싫지만, 노무현류의 개혁 사기꾼도 싫은 사람들 중 일부가 지지했던 문국현이 ‘차떼기’ 이회창과 손잡고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바로 6개월 전 대선 때 문국현이 “비리백화점”이라 비난했던 이회창은 “선배님”, “큰 원군”이 됐고, “부패의 은메달 감”이라던 자유선진당은 “창조적 연대”의

대상이 됐다.

창조한국당 웹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은 문국현의 배신에 치를 떠는 당원들의 분노와 저주로 가득하다. 노무현에 이어서 문국현한테까지 뒤통수를 얻어맞은 허탈감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것이다. 노무현도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문국현의 ‘놈현스런’ 본질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금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지만 대선 때 문국현은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은 미국 쇠고기 업자를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 업자와 차별하는 것”이라며 미국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옹호했다.

비정규직이라던 두 딸이 3억 원대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밝혀진 것이나 이한정에게 6억 원을 받고 비례대표 장사를 한 것은 그의 사기꾼 면모를 생생히 드러냈다. 또, 자이툰 부대가 “세계평화에 기여”했고 노무현 정

부가 “지나치게 자주적으로 갔다”는 문국현이 이회창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지 모른다.

문국현은 이명박이 추진하는 “의료보험 민영화에 반대한다”지만 FTA와 공기업 민영화를 지지하는 그가 얼마나 일관되게 이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문국현의 이런 오락가락 행보는 그의 계급 기반에서 비롯한

것이다. 문국현의 말마따나 “저를 비롯해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2명이 대기업 회장 출신이고 당원 중 기업인 출신이 1천 명이나 되는 만큼 [노선에서] 자유선진당과 배치될 게 없”는 것이다. 그의 궤적은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같은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치인들이 보여 준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미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들이 아니라 독립적 대중 행동에 기대야 한다. 다가오는 6·4 재보궐 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같은 진보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 고시 강행하려는 정부 - 투쟁을 더 확대해야 한다

» 1면에서 이어짐

이명박 정부는 눈치보며 고시 날짜를 슬금슬금 연기하면서도 고시 강행 의사를 결코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정부는 검역주권 강화 등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며 되레 신경질을 냈다.

농림수산식품부 현지 점검단은 “미국에서 쇼만 하다 돌아”와서는 “(미국 쇠고기 도축장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미국의 도축장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아니라 광우병, O157 대장균, 리스테리아균과 같은 괴물을 생산하고 있는 동물 수용소에 불과하다”(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는 사실을 미국산 쇠고기 전문가가 된 국민들 다수가 이미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집은 자신감이 아니라 무대책에서 나오고 있다. 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시를 강행하면 그것을 계기로 투쟁이 수그러들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바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쟁을 더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고시가 강행된다 해도 그것으로 사태가 종결될 수 없음을 더 강력한 항의로 보여 줘야 한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동맹휴업 총투표를 조직한다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동맹휴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신촌지역 대학교들은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려 한다고 한다. 각 대학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자발적 거리 시위가 이명박을 궁지로 몰고 있다 — 저항이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조직 노동자들의 동참이 절실하다

의 학생회들과 활동가들은 학생들이 촛불 거리 시위에 동참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대학생과 20대

청년의 참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노동자들의 조직적 동참이다.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동참한다면 이 투쟁을 한 단계 발전시켜 이명박 정부의 고시 강행을 막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할 수 있다.

공공노조 평등지부 조합원인 이병렬 씨는 몸을 불사르며 저항했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진 농림부지부장은 ‘양심선언’을 했다. 그밖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조

직적 동참을 지도하고 파업 건설에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의 전투적 활동가들에게 기대가 크다. 운수노조는 자신의 노동이 광우병 쇠고기 운송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자신의 노동조합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적 항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이 투쟁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동시에 저항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집단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 또 ‘배후’설 - 국민 요구 외면하는 청와대야말로 배후

조중동과 경찰·검찰은 “촛불집회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배후설이다. 평화로운 촛불은 괜찮지만 거리 시위는 배후에 의해 조종되는 의심스런 움직임이라며 둘을 분리시키고, 거리 시위를 고립시키려는 시도다.

그러나 거리 시위가 시작되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집회 전문 배후세력”에 의해 촛불집회가 변질됐다는 경찰청장 어청수의 말이 새빨간 거짓임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분노의 자생적인 폭발이었다. 5월 2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외쳤건만 미친 소 귀에 경 읽기 같았다. 한 30대 회사원의 말처럼 “그러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청와대로 가자’고 하는 게 아닌가.” 대중의 자생적 행동은 여느 시민·사회단체와 조직 좌파들보다 앞서 나갔다. 멋진 거리의 정치를 연 것이다.

‘미안하다. 미친 소 수입 강행한다’는 요지의 대국민 담화는 결정적 계기였다. 사람들은 이제 청계광장에만 앉아 있을 수 없고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화제가 시위로, 촛불이 들불로 변지는 현상”의 배후는 국민 요구를 외면하는 청와대였다.

경찰 폭력은 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나흘 만에 경찰은 거리 시위 참가자 2백여 명을 연행했다. 정당한 요구가 방패로 찍히고 경찰차에 갇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바뀌지 않은 경찰의 본질을 깨닫고 있다.

민주주의는 교과서에나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거리는 급진 정치의 학습장이 되고 있다.

## ‘배후’설에 제대로 맞서기

경찰이 퍼뜨리는 배후설은 잘 조직되고 투쟁 경험 있는 단체의 참가를 배타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그들 스스로 위축되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운동 단체가 참가하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로 움츠러들기도 한다.

그러나 배후설에 맞서야지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안 된다. 그것은 저들의 의도대로 운동을 약화시키는 길이다.

거리 시위가 시작될 때부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행진을 제대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아쉽게도

국민대책회의는 아직 이 구실을 자임하지 않고 있다. 권위있는 광우병대책회의가 거리 시위를 책임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위대 속에서 주동성을 발휘하려는 단체나 개인들이 경찰 첩자로 몰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운동의 결속력이 훼손되고 있다. 그럼에도 투쟁 경험이 있는 단체와 활동가들은 거리 시위에 적극 동참해 행진을 효과적으로 이끌도록 애써야 한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시위를 해야 경찰 공격으로부터 시위대를 보호하

고 거리의 시민들에게 시위대의 주장을 적극 알릴 수 있다. 거리 시위대는 민주적 토론을 통해 행동을 결정하고 단결해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온갖 공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배후설을 반박하기 위해 거리 시위가 자생적으로 시작됐다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옳지만 자생성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자생적 투쟁에도 초보적인 지도가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투쟁이 크고 작은 기로에 놓일 때 서너 갈래로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 더 큰 위력을 발휘하려면 지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 우리 모두가 배후다 촛불 탄압 중단하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10명  
출석요구서 철회하라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경찰은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5개 단체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광우병대책회의와 2MB탄핵투쟁연대 등과 함께 ‘다함께’도 포함됐다. 또, 광우병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 김광일 상황실 자원활동가 등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몇몇 단체와 개인을 속아내 탄압함으로써 촛불 전체를 위태롭게 하려는 경찰의 전형적인 탄압 공세다. 경찰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촛불집회는 보장하겠다고면서도 실제로는 탄압의 발톱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려 한다. 하지만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저항은 자생적으로 시작됐고, 이들은 이 목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따르고 헌신했을 뿐이다.

따라서 촛불을 지지하는 사람은 모두 경찰이 우리들로부터 속아내 탄압하려는 이들을 함께 방어해야 한다. 그래야 운동을 진전시킬 수 있다.



# 프랑스 우익 정부를 뒤흔든 노동자 · 학생 투쟁

짐 울프리스

지금 사르코지는 프랑스에서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됐다.

사르코지는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벌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식품과 연료 가격 인상에 따른 생계비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지만 물가 폭등 때문에 더 적게 벌게 됐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아주 오만한 방식으로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공개적으로 새 부인과 함께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보냈다.

당선 이후 사르코지는 파업과 거리 시위 때문에 후퇴를 거듭했던 전임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시장의 법칙에 순응해 정리해고와 연금 삭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5월 들어 일련의 시위와 도로 봉쇄 움직임에 직면했다. 어민들은 연료 가격 상승에 항의했고, 학생, 교사,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각종 시위를 벌였다.

사르코지 정부는 어민들에게 약간의 양보를 했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지속하려 한다.

사르코지의 계획을 보면, 내년에 은퇴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 중 절반만이 새로운 인력으로 충원될 예정이다.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다. 또, 사르코지 정부는 노동자들이 온전한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1년을 더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생 노동시간을 40년에서 41년으로 늘리려 한다.

실업 노동자들이 [정부가 소개하는 저임금]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업수당을 삭감하는 안도 추진중이다.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지도자는 주당

35시간 노동제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15일 교사들은 일자리 감축과 시장주의 개혁에 반대하는 하루 행동에 나섰다. 프랑스 전역에서 학생과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이 시위에 가세했다. 일주일 뒤 5월 22일에는 전국적으로 70만 명의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노동자들이 연금 개혁에 항의해 파업과 시위에 참가했다.

## 41년

또 다른 행동의 날이 계획돼 있지만 사르코지 정부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오만하게 선언했다. 교육부 장관 자비에르 다르코스는 “시위에 몇 명이 참가하든 상관없이” ‘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사르코지 정부의 공격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5월 초 여론 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60퍼센트가 새로운 1968년 5월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분노를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 통일이 부족하다.

지난해 사르코지는 노동조합 연맹들

사이의 경쟁 관계를 이용해서 철도 노동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사르코지는 1995년 이래 반(反)신자유주의 투쟁에서 선두에 섰던 노동자 집단인 교사 노동자들을 약화시키려 한다.

사회당은 이런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2007년 대선에서 사르코지에게 패배한 세골렌 루아얄은 역대 사회당 대선 후보들 중 가장 오른쪽에 있었다. 지금 파리 시장인 베르트랑 들라노예가 루아얄에 도전하고 나섰는데, 그는 자신을 “신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로 소개하며 사회당을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혁명적공산주의자 동맹(LCR)의 대변인 올리비에 브장스노가 프랑스 좌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약 8천 명이 브장스노와 LCR의 새로운 반(反)자본주의 정당 결성을 지지하는 모임들에 참석했고, 프랑스 전역에서 2백 50여 개의 준비 모임이 결성됐다.

앞으로 프랑스 급진좌파는 사르코지에 대한 반대 정서를 정치적 무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르코지의 공격에 저항할 뿐 아니라 갈수록 맛이 가는 사회당을 대신할 진정한 정치적 대안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짐 울프리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이고, 런던대 킹스칼리지에서 프랑스 정치사를 가르치고 있다.

## 레바논 파병 연장 기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UN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을 1년 연장하는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2007년 7월부터 레바논에서 주둔중인 한국군 동맹부대원 3백59명의 파견기간을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UN의 국제 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와 중동 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황당한 거짓말이다.

UN 평화유지군은 2006년 부시 정부가 후원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 전쟁이 실패한 후, 레바논인들의 미움을 받는 친미 정당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속적인 헤즈볼라를 통제하기 위해 파견됐을 뿐이다. 이명박은 세계 최대 산유지인 중동에서 미국을 포함한 열강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도우려는 것이다.

사실 UN 평화유지군은 전 세계적으로 파병지에서 점령군으로 활동해 왔다. 저명한 아동권리 단체인 ‘세이프더칠드런’은 최근 보고서를 발간해 ‘평화유지’의 이름 아래 UN 평화유지군이 벌인 만행을 폭로했다. 이 보고서에는, 아프리카의 코트디브아르와 수단, 라틴아메리카의 아이티 등에서 평화유지군 군인들이 저지른 아동 성학대와 성폭행이 기록돼 있다.

평화를 위해 파병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은근슬쩍 점령군 파병을 연장하려는 정부에 맞선 항의 행동을 준비하자.

김용욱

## 중국 지진

김용욱

중국 쓰촨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금까지 7만 명 가까이 죽고 수백만 명이 이재민이 된 대참사였다. 언론들은 대체로 중국 정부의 지진 대처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단순히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책임임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일부 중국인들은 이에 항의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쓰촨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과 그 파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청두 대학교 교수의 논문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총 7천 동의 학교 건물이 주저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총 몇 명의 학생이 죽었는지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부실 공사에 책

## ‘공산당을 중심으로 총단결’?

임이 있는 자를 찾아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

분노한 일부 학부모들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뎬주(綿竹) 시에서는 5월 24일 학부모 수백 명이 학부모들이 자녀의 영정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인 데 이어 25일에도 고속도로를 점거한 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부실 공사

지방 관리들은 고질병인 부패 행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명보>의 보도를 보면, 5월 21일 더양(德陽) 시 뤼장(羅江) 현에서 몇몇 주민들은 군용 화물트럭이 한 상점에 구호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다. 격분한 주민들은 관리와 경찰들을 구타하고 경찰 차량까지 부딪

다.

이재민들은 천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청두 시내 시장에서는 ‘구호 전용’이라고 쓰인 천막이 버젓이 팔리고 있기도 하다.

중앙정부는 사람들의 분노를 무마하려고 당 기율위원회를 현지에 파견했다. 그러나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중앙정부가 만든 괴물이다. 덩샤오핑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고 말하지 않았던가. 지방 관리들은 자본가처럼 행동하라고 요구받았고 스스로 자본가가 됐다. 성인군자가 되라고 염불을 외운들 소용없을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진 사태가 공산당을 중심으로 대중을 단결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겠지만 사실 언제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노의 씨앗이 뿌려졌을 뿐이다.



# 고유가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이명박

장호중

국제 유가가 1백30달러를 돌파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곡물 가격 상승이 결합돼 물가 폭등을 낳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기름값이 비싸면 그만큼 소비를 줄이는 것이 시장 친화적 대책”이라며 서민의 생활 수준을 공격하려 한다.

나아가 지난 22일에는 전기·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연내 인상 방침을 밝혔다. 이것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이기도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대책’은 핵발전 확대다. 지식경제부 차관 이재훈은 현재 전체 발전량의 36퍼센트를 차지하는 핵발전 비중을 50퍼센트까지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은 아직까지도 전무하다. 지난해 7월 16일에도 일본에서 지진 때문에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2003~2007년에 국내에서 사고로 원전이 멈춘 경우도 44건이나 된다.

게다가 막대한 보조금을 빼고 나면 핵발전은 역사상 가장 비싼 발전 방식이다. 지금까지 건설된 4백40여 개 핵발전소에 지원된 각국 보조금은 적어도 1조 달러가 넘는다. 핵발전은 에너지 위기의 대안커녕 값비싼 시한폭탄일 뿐이다.

## 마른 수건 쥐어짜기

고유가 속에서 고통은커녕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2007년 4사분기에 국내 최대 정유사 중 하나인 S오일은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20퍼센트, 영업이익이 75.2퍼센트 늘었고 SK에너지도 매출액이 23퍼센트 증가했다. 두 정유사의 주가도 지난해에만 각각 25.1퍼센트, 87.3퍼센트 올랐다.

물론 일부 기업주들도 유가 인상에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정유업계와 그 주식을 보유한 다른 대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황금 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유가 인상으로 노동자들은 출퇴근 시간에 미어터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만 부자들은 기름값 인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한결 여유가 생긴 도로를 누비게 됐다.



노동자·서민 쥐어짜는 고유가 ‘대책’에 맞서 ‘밥그릇’을 지켜야 한다

반면 화물 노동자들은 치솟는 기름값을 아끼려고 통행량이 적은 심야에만 운송하거나 내리막 길에서 기어를 풀고 운전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누가 기름을 훔쳐갈까 봐 운전석 뒷자리에 웅크리고 잠을 자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이렇게 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운송료를 올릴 기미도 보이지 않고 정부는 유류 보조금 지급마저 곧 중단할

예정이다. 농·어민들도 농기계와 어선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 비명

따라서 당장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노동자·서민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폭리를 챙기고 있는 정유사들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해 화물 노동자들과 농·어민에게 충분한 유

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유가 폭등으로 촉발된 시위는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대정부 투쟁을 촉발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 버마 민중 항쟁이나 1997년에 수하르토를 몰아낸 인도네시아 민중의 투쟁에서 보듯 이런 투쟁은 정부를 커다란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지난 5월 15일 38일 동안의 파업 끝에 운송료 인상 등을 얻어낸 포항 덩크 노동자들의 투

쟁은 고유가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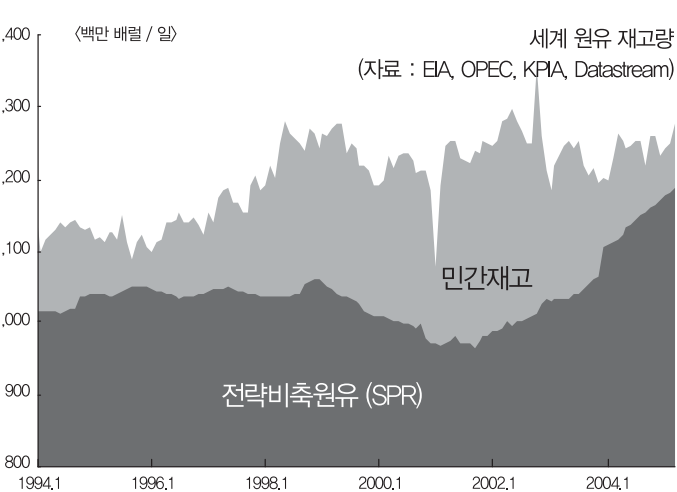
미친 소 운송 거부를 선언한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현재 운송료 인상 등을 내걸고 6월 초 파업을 추진 중이며 일부 지역에 이미 파업이 시작됐다. 덩크·레미콘 노동자들도 6월 중순에 파업을 결정했다. 이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해야 하며, 이런 투쟁이 하나로 뭉쳐진다면 더 강력해질 것이다.

## 누가 고유가의 쥔값을 치러야 하나

주류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 폭등의 원인을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서 찾는다. 중국의 석유 소비가 큰 폭으로 늘었고 중동 산유국들이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먼저 수요를 살펴보면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 미국은 중국의 3배, 전 세계 소비량의 4분의 1을 소비한다. 중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 2백만 배럴 늘어나는 동안 미국의 석유 소비량을 1백만 배럴 가까이 늘어났고 석유 수입량은 하루 평균 2백만 배럴 이상 늘었다. 미국의 1인당 석유 소비량은 중국의 13배나 된다. 심지어 한국의 1인당 석유 소비량도 중국의 8배나 된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와 주류 언론들이 중국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이 낳는 부작용(주로 선진국들 입장에서)을 부각하려는 측면이 크



다. 오히려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장 중요한 원인을 꼽으라면 9·11 이후 미국의 지배자들이 중동에서 벌이고 있는 대테러 전쟁을 지적해야 한다. 중동이 전화에 휩싸이고 석유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늘면서 세계 각국 정부는 전략비축유(SPR)의 비축량을 크게 늘렸다.(위의 <그림> 참고)

공급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도 미국 정부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세계 석유 생산

량 2위를 차지하던 이라크의 석유 생산량을 반토막내 버렸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맞선 저항 세력의 석유 생산 시설 공격 위협 때문에 원유 증산이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란에 대한 전쟁 위협은 이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달러 약세 정책을 펼 것도 미국 정부다. 원유가 달러화를 기준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산유국들은 석유 수요가 늘어

그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했고 결국 공급량을 제한해 유가를 더욱 올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보충해 왔다.

중동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약화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되돌리지 못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누적된 이런 변화에 더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경기 후퇴가 유가 폭등을 더욱 부추겼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대형 투기 자본들이 원자재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올 3월 현재 석유·곡물 등 원자재 상품에 투자하는 국제투기자금은 약 2천6백억 달러로 2003년 말(1백30억 달러)의 20배에 이른 다.”(<조선일보>)

그리고 유가 폭등, 주가 폭락과 투기 자본의 이동, 달러 가치 하락 등이 서로 연쇄 반응하며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유가 폭등의 쥔값을 치러야 할 것은 평범한 전 세계의 민중이 아니라 전쟁광 부시와 이명박 같은 그 똥마니들이다.



# 또 다른 ‘특정위험물질’, 한미FTA를 제거하자

한수영

지난 2월 한미FTA 미국 측 협상대표 웬디 커틀러는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쇠고기 시장 개방이 [미 의회의] 승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열쇠’라고 일러냈다. 그러나 쇠고기 시장 개방은 지금 한국에서 한미FTA 비준의 ‘자물쇠’가 돼 버렸다. 나아가 최근에는 미국의 유력한 대선 주자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서한을 부시에게 보냈다. 오바마는 부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합의문의 문구들이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시장접근을 확실히 시키기에 부족함”과 “자동차 관련 조항이 불공정하게 한국 측에 우호적”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는 이것이 한미FTA가 “한국에게 유리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것은 제 눈에 물대끼 식 해석일 뿐이다.

오바마의 이런 태도는 FTA에 대한 미국의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의 반감을 반영한다.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미국 CEO 평균연봉이 4백60퍼센트나 증가하는 동안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13퍼센트나 꺾였다. 10년 동안 90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도 한다. 오바마는 노동자들의 이런 정당한 반감을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기는 데 이용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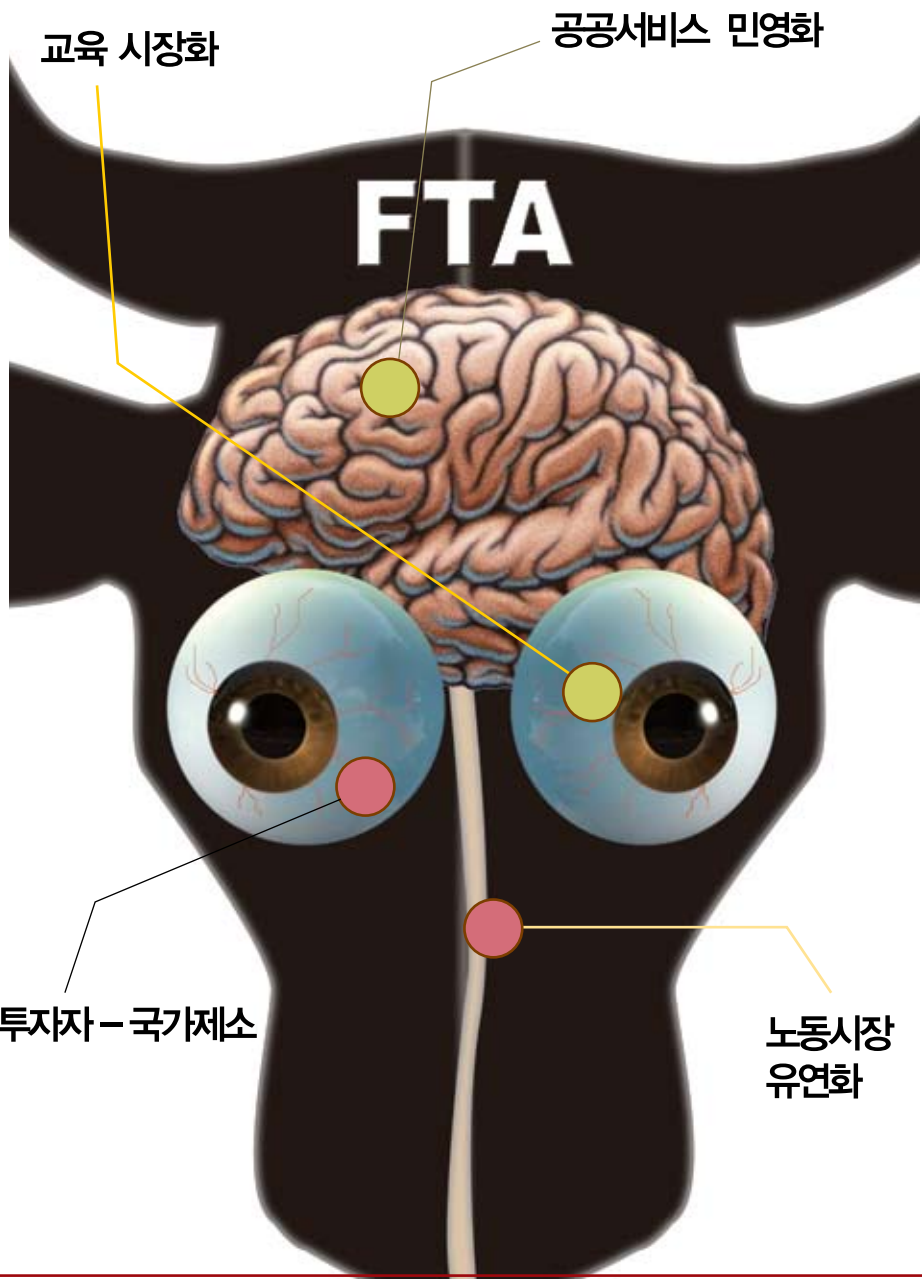
다른 한편 오바마는 미국 자동차 산업 등 한미FTA에 특실을 쬔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 자본가들은 협상에서 한국의 경쟁 자본가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미국 자본과 한국 자본 사이의 이해관계는 단순히 대립되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면 미국의 축산업계가 이득을 보고 한국의 축산업계가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나 LG아워홈 같은 한국의 대형 급식업체들은 오히려 이득을 볼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FTA에 대한 한국 지배자들의 주된 목표는 FTA라는 “외부 충격을 통한 구조조정”으로서,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민영화, 기업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가 ‘미국에 불리하나 한국에 유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미국 지배자들과 한국 지배자들은 FTA를 통해 자기 나라의 평범한 민중을 공격하고 막대한 이윤을 뽑아내려 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명박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한미FTA 통과를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역사의 분기점”이라며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 3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겨난다 …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 말했다.



## 청소년들 손의 촛불을 끄려는 “쥐명박”

이슬기(청소년 '다함께')

이명박 정부가 청소년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말로만 들던 20년 전 “독재정권 시절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경찰은 ‘5·17 휴교시위’를 벌이자는 문자메시지를 처음으로 보낸 재수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 사건을 개인의 ‘범죄’로 몰아가려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휴교시위를 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문자메시지 때문이 아니다. 청소년들을 입시 지옥으로 내몰고 미친 소를 먹여 머리에 구멍을 내려는 “쥐명박” 정부의 미친 정책 때문이다.

5월 27일 새벽 이명박 정부가 연행한 시민들 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총장 어정수는 여고생을 학교도 가지 못하게 12시간 동안이나 잡아뒀다.

다.

그런데 과연, 미친 소를 먹으면서까지 한미FTA를 체결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경제가 살아날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를 고성장 시켰다는 기대는 실현되기 어렵다.

실사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장 ‘서민 살림살이’ 경제가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멕시코에서는 NAFTA 체결 후 9년간 외국인 직접투자는 4배 이상 늘고 수출은 2배 이상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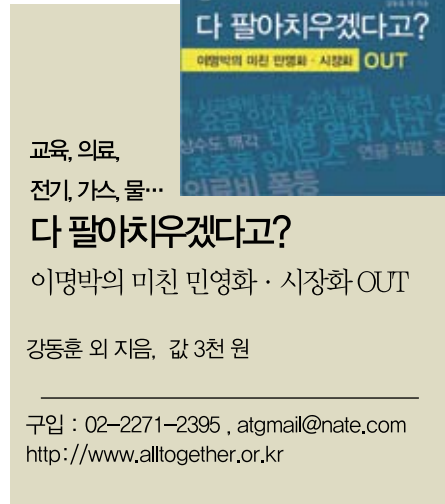
7.9퍼센트 하락하고 실업률도 5.4퍼센트 증가했다.

한미FTA는 미친 소에 반대해 거리로 뛰쳐나온 우리들이 행동하는 또 다른 이유인 의료 민영화나 교육 시장화, 그리고 물, 전기, 가스 등 광범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정책도 포괄하고 있다. NAFTA 이후 멕시코는 필수 식량 저가 공급을 중단했다. 버스·국영석유·철강·광산 등이 민영화됐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됐다.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FTA에 포함된 치명적인 독소다. 이 제도에 따라 기업은 자신의 시장 개척을 가로막는 나라의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미국 화학제품 기업은 캐나다의 인체 유해물질 규제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를 제소한 바 있다. ‘역진방지조항’은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한다. 정태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 두 조항이 맞물릴 경우 “어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되돌릴 수 없게 되고 …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자유화만 가능할 뿐, 공공성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 거리의 저항이 성공해 쇠고기 협상이 백지화되더라도 한미FTA가 통과되면 미국 축산업계가 ‘투자자-국가제소권’을 활용해 한국 정부를 공정 경쟁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소송이 승리한다면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는데다 벌금까지 물게 될 수 있다. 게다가 ‘역진방지조항’으로 이런 사태를 되돌릴 수도 없게 된다. 한미FTA는 광우병보다 더 심각한 ‘특정 위험물질’인 것이다.

이명박과 재벌·강부자에게 한미FTA는 이득이겠지만,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으로 하루하루 고단한 나날을 살아가는 노동자들과 농약을 밭에 뿌려야 할지 입에 넣어야 할지 고민하는 농민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거리에서 움트고 있는 반란의 물결은 쇠고기 협상을 백지화시키고 나아가 한미FTA도 폐기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청소년은 권리의 주체로 표현·집회의 자유가 있다”며 “앞으로 열리는 촛불집회 현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경찰과 교육당국은 학생·청소년들의 평화집회를 위축시키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명박 정부와 그에 맞장구치는 교육청은 청소년 탄압을 당장 그만두야 한다.

이명박이 하는 모든 게 싫은 청소년들은 “쥐명박”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쥐’를 잡으러 거리로 나와 촛불을 밝힐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치사하고 아비한 탄압으로 청소년들의 촛불을 끌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요구를 내걸고 집회·행진·파업을 하고 투쟁의 방향을 토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그 자체다

## 민주주의는 왜 교과서에만 있을까?

서범진

촛불집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은 “정부는 왜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민주주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가?”라며 성토했다. 이명박은 시위 참가자들이 즐겨 부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노래 가사와는 정반대인 결론을 내리는 길을 걷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친 소 수입을 위해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군사 독재 정권처럼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래 쌓아온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를 무로 돌리려는 것이다. 대운하 건설, 의료보험 민영화 등의 문제에서도 전 국민의 반대를 무릅쓴 이명박 불도저의 막가파식 폭주는 계속되고 있다.

비록 대선·총선 사상 최대의 기권을 속에서 소수 유권자의 지지만 받고 당선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이토록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를 수 있는 것이냐는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비민주적인 정부에 반대해 이미 5월 초에 1백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명박 탄핵 촉구 서명까지 했다. 그러나 농림부 장관 정운천 해임건의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탄핵을 발의할 리는 없다.

우리에게는 몇 년에 한 번 2~3분간 투표소에 가는 것 외에는 정치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 동안에는 그럴듯한 말을 잔뜩 늘어놓지만, 일단 선출만 되고 나면 자신을 뽑아준 대중의 뜻을 거스르기 일쑤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뽑아 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권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 세력의 말에 귀 기울인다. 어마어마한 재산과 자본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할지 결정하는 재벌들, 조종동 같은 거대 언론 사주들,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 장성과 경찰 간부들, 고위 공직자와 판·검사를 등이야말로 의회와 정부를 ‘통제’하고 사회의 술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장본인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통제하는커녕 투표로 선출할 수도 없다.

3조 원을 가진 국회의원 정몽준이나, CEO 출신으로 공식 신고한 재산만 3백50억 원에 이르는 이명박 등 상당수 정치인들 자신이 바로 이런 지배계급의 일원이기도 하다. 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과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지배계급은 정치자금과 로비, 인맥 등으로 정치인들을 단단히 묶어매고 있다.

권력층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많은 경우 소수 권력층과 강부자, 재벌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미친 소 수입은 재벌들에 이익을 주는 한미FTA를 위한 것이다. 또, 의료보험 민영화는 삼성생명·AIG 등 거대 민간 보험사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안겨줄 것이다. 대중이 이런 정책에 반대하자 이명박은 집회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까지 억압하며 대중의 분노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

이런 점은 민주화 운동 출신이었던 노무현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은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하더니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를 강행했고, 비정규직 9백만 시대를 열어젖혔다. 이에 반

대하는 사람들은 집시법, 국가보안법을 통해 탄압했다.

만약 선출된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정말로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진정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총동원해 이를 강제로 무너뜨릴 준비가 돼 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사장과 우익들, 군부는 차베스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자본을 회수하고, 미디어를 통해 공세를 퍼붓고,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 이미 1971년 칠레에서는 민중운동의 힘으로 당선된 진보적 아옌데 정권이 기업주들의 공세와 미국 CIA와 손잡은 군부의 쿠데타로 무너진 바 있다.

국민들 목소리에는 완전히 귀를 틀어막은 이명박 같은 정치인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거리 시위와 같은 민중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우리의 요구를 내걸고 집회·행진·파업을 하고 투쟁의 방향을 토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그 자체이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얻어낼 수 있는 씨앗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에도 도전해야 한다. 그러려면 사회의 부를 소수의 특권층이 아니라 다수가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자본주의 국가 대신,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이 언제든지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소환·통제할 수 있고 민주적 토론을 통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국가가 필요하다. 1871년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 등장한 ‘파리 코뮌’과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등장한 노동자 평의회 — 비록 나중에 스탈린에 의해 집식당해 1인 독재로 변질됐지만 —은 그 가능성을 보여 줬다.

1987년 6월 항쟁이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강부자와 재벌들의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모든 언론·방송을 조종동처럼 만들려는 2MB

이명박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명박은 인수위 시절에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를 하더니 ‘방송통제위원회’에 자신의 ‘형님’인 최시중을 앉혔다. 최시중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명박 비난 댓글 삭제를 요청하고, KBS 사장 정연주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하는 등 ‘이명박 구하기’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다.

나아가 청와대는 ‘PD수첩’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방침을 발표했고, 국제청은 포털사이트 ‘다음’ 세무조사에 나섰고, 감사원은 우익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KBS에 대한 압박용 감사를 결정했다. YTN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자리에는 ‘MB맨’을 기용하려 한다.

최근에는 ‘비판언론 대책회의’를 열어 “협조 안되는 언론사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정부 광고를 안 주겠다는 협박도 하고 있다. 결국, 5공식 “맹박뉴스”, “형님뉴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그토록 “언론자유”를 지켰던 조종동은 이명박의 언론 통제를 옹호하고 있다. 이명박이 조종동에게 KBS와 MBC를 넘기려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맹박뉴스”

통합민주당은 최시중 해임을 요구하는 등 언론 통제에 맞서는 척하지만 이들은 언론 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물지마’ 이라크 파병·한미FTA 추진을 위해 언론을 통제한 장본인이다.

언론 노동자들만이 이명박의 언론 통제 시도를 좌절시킬 자격과 능력이 있다. 그 점에서 KBS 노조가 지금 상황에서 정연주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물론, 정연주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KBS에서 비정규직 확대 등 구조조정을 밀어붙였고 한미FTA 저지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과 우파의 공격 속에 정연주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MB맨이 들어서면 언론통제는 더 노골화되고 노동자들의 처지도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연주 사장에 반대하면서조차 우파의 퇴진 압력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1990년 노태우가 당시 개혁 성향의 KBS 사장을 쫓아내고 친정부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KBS 노동자들은 37일간 제작을 거부하고 방송민주화 투쟁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랑스런 투쟁의 역사가 재방송돼야 한다.

강철규



## 북한 식량난

## 조건 없는 지원으로 재앙을 막아야 한다

한규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 수십만~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대량 탈북 사태가 벌어진 1990년대 중반의 대재앙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경고가 빗발친다.

실제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1백67만 톤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또, 인체의 최소 신진대사 활동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열량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백19만 톤이다. 이는 7백13만 명분에 해당한다.(현대경제연구원)

식량난이 배급체계에서 비교적 우선순위에 있는 전문 직종 종사자, 군수공장 노동자까지 퍼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북한 구호단체 ‘좋은 벗들’)

북한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들었다. 석유·전력 공급이 붕괴하자 비료, 농기계 등 농업 관련 산업도 마비됐다. 이에 따라 북한은 더욱 더 ‘자연 약탈적’ 농업에 의존했고, 이는 산림 황폐화와 토지 산성화를 심화시켜 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북한의 곡물 생산은 2000년대 들어 부분적으로 회복됐지만 현재까지도 1990년의 7백만 톤에 못 미치는 4백만 톤 안팎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현재 북한의 식량 분배 체계는 엉망이다. 시장과 경쟁을 강화한 2002년 이른바 ‘7·1 조치’로 분배 체계는 오히려 교란됐다. 이는 공공부문 ‘민영화’의 효과와 비슷한 것이었다. 국가가 제공하는 공식 배급 체계의 범위는 축소됐고 배급 가격도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현실화”돼 급격히 인상됐다.

일부 당·국가 관료들은 곡물을 빼돌려 시장에 내다 팔면서 급속히 부를 축적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배제됐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세계적 식량가 폭등도 상황을 더 심각하게 했다. 북한이 주로 의존하는 중국산 수입 곡물 가격이 올초에 비해 30퍼센트나 급등했다.

## 생색

그 결과 북한의 식량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쌀값은 올초 1킬로그램당 1천 원 수준에서 지금은 3천 원 수준으로 폭등했다. 반면 노동자 월평균임금이 2천5백~3천 원 수준이다. 현재 북한 지배자들의 태도는 잔인한 ‘포기’ 상태에 가깝다.

제국주의 열강들도 북한 주민들을 대

이명박이 재벌·강부자에게 퍼 주는 돈이면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재앙에 빠뜨린 주범들이다. 그동안 미국은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봉쇄 정책을 써왔다. 사실, 북한은 옛소련 붕괴 이후 ‘세계체제’로 편입하려 했지만 미국은 이를 차단했다.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는 데 ‘북한 위협’이라는 빌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최근 북미 회담이 약간 진전되는 듯하자 미국은 식량 50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생색을 냈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더러, 이조차 몇 차례에 걸쳐 나눠서 주는 것이다.

부시조차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데 이명박은 북한이 핵폐기를 하기 전에는 지원을 않겠다고 못박아 왔다. 이명박은 북한이 핵폐기를 하면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만들어 주겠다고지만, 남한 경제도 살

리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할 소리는 아니다.

최근 이런 이명박의 대북 강경책이 여론의 못매를 맞고 북미 관계가 유화국면에 들어서면서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여전히 “북한이 고맙다고 한다면”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명박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중국의 중재에 못 이긴 척 대북 식량 지원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정말 껄죄죄하기 그지없다.

한편 조중동, 한나라당 등 우익들이 노무현의 “대북 퍼 주기”를 비난한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이들은 원조된 식량이 북한의 상층부만 살찌게 한다고 태클을 걸었지만, 실제로 원조는 최악의 비극을 막는 데는 일정정도 효과가 있었다. 2000년대 중반에 있던 위기는 원조 덕분에 대량 아사 사태로 연결되지 않았고, 곡물의 시장 가격을 낮춘 효과가 있었다.

물론 김대중·노무현의 대북 식량 지원 역시 냉정한 계산과 위선에 바탕한 것이었다. 그들은 북한의 붕괴가 남한 자본가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계산에서 식량 지원을 해 왔다. 이조차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한 적도 있다.

대북 원조가 결국 북한핵을 불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북한핵이라는 괴물을 낳은 것은 미국의 군사적 대북 위협과 남한의 군비증강이었다. 이미 남한 국방비는 북한 GNP 전체보다 많다. 이런 군비경쟁의 압력은 북한 주민에게 돌아갈 북한의 가용자원을 더욱 줄어들게 만든다.

그동안 남한이 북한에 “퍼 준 돈”은 대략 1년에 5천억 원 정도인데, 이는 국방부가 검토중인 미국산 중고 아파치 헬기 도입 가격의 절반도 안 된다.

우리가 북한 민중과 어린이들을 살리려면 조건 없는 대규모 대북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 민영화야말로 부패·비리의 도가니다

공기업 비리를 척결하겠다고며 나선 이명박과 조중동은 이를 통해 ‘공기업 부패를 없애기 위한 대안이 민영화’라는 논리가 그럴 듯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물론 공기업 사장과들고 고위 임원들의 부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민영화가 공기업 부패를 완화시킬까? 현실은 정반대다. 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영화는 공기업 부패를 더 부채질한다.

민영화 정책은 끊임없이 해당 부문을 독점하려는 기업들의 경쟁을 부추긴다. 사장들은 경쟁 기업을 따돌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이들을 매수한다. 그래서 민영화에는 불박이 장롱처럼 부패가 따라다닌다.

공기업이 민영화될 때마다 엄청난 특혜와 뇌물이 오가곤 했다. 한국 경제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한국조선공사·인천중공업 재벌 기업들이 인수할 때도, 한일

은행·조흥은행 등 4개의 국책은행이 민영화될 때도, 포항제철·한국전력·한국통신의 정부 지분이 팔릴 때도 항상 그랬다. 가스 부문의 부분 민영화로 막대한 수익을 긁어모은 포스코·GS칼텍스·SK가 민영화 추진을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일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 명단을 확보해 로비에 돌입한 것이었다.

각종 로비와 추잡한 인수 경쟁으로 공기업을 사거나 공기업 지분을 챙긴 기업은 당장 인수 비용을 회수하려고 혈안이 된다. 그 결과 민영화된 기업들 내에서 회계장부 조작 같은 비리가 더욱 판을 친다. 예를 들어 2000년 당시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20퍼센트도 안 되는 헐값에 사들인 두산그룹은 회계장부 조작으로 수천억 원을 챙겼다. 그러는 사이 노동자 1천2백 명이 잘렸다.

민영화는 경쟁사들 간의 담합 비리도 부추긴다. 한국통신이 민영화된 후, KT와 하나로통신도 가격담합으로 수익을 크게 챙겼다. 그러는 사이 안전을 위한 설

비 투자나 연구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요금은 계속 올랐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길 카길도 멕시코에서 농수산물 관련 유통공사가 민영화되자마자 이 유통회사와의 담합 비리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 부패의 온상

이명박의 물·전기·가스·교육·의료 민영화도 부정부패의 온상을 만들 것이다.

건강보험이 민영화되면 가장 많은 이득을 챙기게 될 삼성생명과 AIG 같은 민영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정부 관료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펼쳤다. 노엄 촘스키가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가》에서 “민영화는 대체로 부패한 정부가 시행한다”고 한 말이 참말로 맞다.

민영화가 부패를 더 부추긴다는 점은 전 세계에서 이미 입증됐다. 1990년대

옛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민영화 과정은 대형 부패 스캔들의 연속이었다.

거대한 부패망이 더 촘촘해지는 동안, 우리의 월급 봉투와 서비스 질 향상에 들어야 할 돈이 부패한 정치인들이 챙길 사과 박스에 들어간다.

공기업의 부패·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경쟁이 아니라 공공성이 기준이 돼야 한다.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공기업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검증·참여하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내부 고발과 부패 감시 구실을 할 민주노조가 더 강화돼야 한다.

나아가 공기업을 이명박과 부패한 관료들이 시장 논리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서민이 공공성의 원리로 직접 운영·통제하게 될 때 부패 해결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김여진



#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에 지지와 연대를!

5월 31일 퀴어문화축제 개막과 함께 한국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이라 할 수 있는 퀴어 퍼레이드가 열린다. ‘자긍심 행진’은 미국 동성애자들이 차별과 천대에 맞서 투쟁한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1969년 6월 28일 뉴욕의 ‘스톤월 인’이라는 동성애자 술집에 경찰이 쳐들어와 손님들을 잡아가려 했다. 여느 때와 달리 동성애자들은 경찰의 폭력에 맞서 저항했고 며칠 동안 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1960년대 후반 전 세계를 휩쓴 저항과 반란의 물결 속에서 벌어진 스톤월 항쟁은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벽장에서 나와 자신을 억압하는 체제에 저항하도록 고무했다.

오늘날 전 세계 성소수자들은 ‘자긍심 행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차별과 편견에 도전한다. 2000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퀴어문화축제도 15년을 이어온 한국 동성애자 운동의 성과로 자리 잡았다.

동성애자 해방 운동은 많은 성과를 낳았지만 진정한 평등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편견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천대에 시달린다. 평등한 권리는 고사하고 학교와 직장, 군대 등 사회 곳곳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멸시와 폭력이 만연해 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대다수 동성애자들은 일상에서 자신의 성적체성을



성소수자 차별 반대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성소수자들 — 이들도 이명박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친구다

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학교와 가정은 흔히 가장 끔찍한 멸시와 폭력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이런 현실은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 10대 레즈비언들을 대상으로 벌인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의 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편견

지배자들은 동성애가 비정상이고 부자연스럽다는 편견을 조장한다. 한국에서도 정부와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이 동성애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동성애자 단체들의 투쟁으로 2004년 삭제되기 전까지 동성애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었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차별금

지법안의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명박도 대선 후보 시절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사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동성애에는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진짜 ‘비정상’은 미친 소를 수입하려 하고, 청소년들과 서민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려는 이명박 정부다. 미친 소 수입으로 폭발한 이명박에 맞선 대중적 저항에 성소수자들도 함께 하고 있다. 동성애혐오 이데올로기는 여성차별,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분열시킬 뿐이다. 동성애자 억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우리들의 단결을 원치 않는 자본주의 체제와 지배자들이다.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이명박 정책에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편견과 차별에 맞서 행진하는 성소수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이나라



## 제12회 인권영화제

5월 30일(금) ~ 6월 5일(목)  
서울 대학교 마로니에 공원, 광화문 미디어아트  
<http://www.sarangbang.or.kr/hrfilm>



열두 번째 인권영화제가 <그들만의 심의를 심의한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끊임 없는 검열의 잔재인 등급심의와 그것을 유지·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영화제가 거리로 나온 것이다. 매회 무료로 상영되는 인권

영화제는 신자유주의와 이윤 중심의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려 왔다. 상영작 <사고 파는 건강>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도 매년 1천5백만 명이 죽어가는 남반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다국적 석유기업 엑손모빌을 폭로하는 <기울어진 세계>, 미군 기지 건설을 위한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 이후 거주 공간을 빼앗긴 평택의 삶을 다룬 영화 <길>도 소개된다.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가 결합된 <오월 상생>은 1980년대 민중가요 다섯 곡과 함께 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영화다.

<전장에서 나는>은 이라크에 파병된 군인들과 팔레스타인을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다. 테러리스트로 몰린 이주노동자에 대한 영화 <나를 감시하지 마>와 <마야 거르쥬>도 이주노동자를 짐승처럼 공격하는 현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영화다. 동성애자, 장애인, HIV감염인 등 사회적 소수자인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과 편견에 대한 영화 <일터에 당신의 자리는 없다>도 추천한다.

남미의 ‘반미 좌파 벨트’인 베네수엘라, 칠레, 볼리비아를 누비며 차베스 대통령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제작한 <미국, 민주주의를 침략하다>도 상영된다.

최운진



## 2008 서울LGBT 필름페스티벌

6월 4일(수) ~ 8일(일) / 서울아트시네마  
<http://www.selff.com>



서울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영문 앞글자를 모은 것으로 성소수자를 지칭) 필름페스티벌이 열린다.

이곳에서 LGBT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소수자들을 향한 억압·차별·편견을

확인하고 모두가 느끼는 인간의 감성과 사랑, 삶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만날 수 있다. <마크와 클레어>는 쌍생아로 태어난 마크와 알렉스의 커밍아웃, 성장 과정에서의 집단 괴롭힘 문제를 다루면서 편견을 이겨내는 과정을 담은 뛰어난 다큐멘터리다. <올드 랭 사인>은 노인이 되어 우연히 종묘공원에서 옛 연인을 만난 두 남자의 사랑을 다룬 영화다. 이 밖에도 트랜스젠더의 삶을 다룬 <3 x FTM>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 유쾌한 시선으로 성소수자들의 삶을 담아 낸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최운진

## 맑·시·즘·2·0·0·8

은 저항운동의 토론 광장이자 축제입니다.

50여 개의 강연과 영화 상영·콘서트·사진전·시 낭송 등이 어우러질 것입니다.

광우병 쇠고기와 한미FTA,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 물·전기·가스 민영화 등을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른 세계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장입니다.

맑시즘2008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열린 토론과 감동의 공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요 연사

조너선 닐 영국의 반자본주의 운동가, 《미국의 베트남 전쟁》(책갈피) 저자 이언 버철 영국의 맑스주의 역사가, 영국 미들섹스대학교 프랑스학 교수  
강기갑 민주노동당 재선 국회의원 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김수행 맑스주의 경제학자, 《자본론》(비봉) 번역  
정성진 맑스주의 경제학자,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이희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이슬람》(청아) 저자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지부장 강양구 <프레시안> 과학·환경 담당 기자

## 저항운동의 축제

맑·시·즘·2·0·0·8

일시\_ 8월 14일(목) ~ 17일(일)  
장소\_ 고려대학교  
주최\_ 다함께  
참가문의\_ 02-2271-2395,  
[atgmail@nate.com](mailto:atgmail@nate.com), <http://www.alltogether.or.kr>



## ‘다함께’의 기본 입장

###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만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증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제5회 교사 포럼

#### 1968혁명 40주년 기념 포럼 — 196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연사: 김인식(‘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5월 31일(토) 오후 3시  
장소: 책사당방(2호선 신촌역 6번 출구 용악국 건물 5층)  
주최: ‘다함께’ 교사 모임  
문의: 02-2271-2395 / 참가비: 4천 원

### 청소년 포럼

#### 우리 머리에 구멍을 내려는 2MB 정부 — 미친 소와 한미FTA는 무슨 사이니~?

연사: 박건희(수의사, 광주병국민대책회의 정책팀)  
일시: 5월 31일(토) 오후 3시  
장소: 미지센터 평화방(3,4호선 충무로역 4번 출구)  
문의: 010-6822-8692

### 대학 맑스주의 포럼

#### 2MB의 환장할 교육 정책 — 대안은 무엇인가?

연사: 강영만(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집행위원)  
일시: 6월 3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한양대(추후 공지)  
문의: 010-6749-7949

#### 교육, 의료, 물, 철도 —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연사: 김어진(‘다함께’ 노동조합팀 활동가)  
일시: 6월 4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단국대(추후 공지)  
문의: 010-3555-0773

#### 광우병 쓰나미와 한미FTA —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인가?

일시: 6월 3일(화) 6시 30분  
장소: 중앙대 문과대 2857 강의실  
문의: 011-9050-7065

#### 교육, 의료, 물, 철도 —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연사: 정종남(‘다함께’ 노동조합팀 활동가)  
일시: 6월 5일(목) 6시 30분  
장소: 한국외대(추후 공지)  
문의: 011-9937-1755



### 지역 사회포럼

#### 서울 중부사회포럼

#### 광우병, 조류독감, GMO — 누가 우리의 먹거리를 위협하는가?

연사: 박건희(수의사, 광주병국민대책회의 정책팀)  
일시: 6월 4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종로5가 임호빌딩 701호(이화예식장 옆)  
문의: 017-224-2157 / 참가비: 2천 원

#### 서울 남부사회포럼

#### 2MB의 미친 정책 파헤치기 — 재앙을 불러올 의료시장화와 교육입시지옥화

연사: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송재혁(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공립중등관악동지회장)  
일시: 6월 4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교대 학생회관 2층 톨마루  
문의: 010-8181-4800 / 참가비: 2천 원

#### 서울 동부사회포럼

#### 곡물가격 폭동 — 세계는 왜 굶주리는가?

연사: 윤병선(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 《이윤에 굶주린 자들》 역자)  
일시: 6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간국대학교 상하관 109호 (27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도보 15분,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3번 출구 도보 5분) / 참가비: 2천 원  
문의: 류민희(010-5581-0506), <http://blog.naver.com/atgeforum>

#### 서울 서부사회포럼

#### 이명박이 가져올 또 다른 재앙 — 의료민영화, 입시지옥화

연사: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진영호(전교조 서울지부 공립중서부지회장)  
일시: 6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연세대 공대 A014호 강의실  
문의: 010-5232-1905, 016-785-4957,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 추가된 포럼은 ‘다함께’ 웹사이트(<http://www.alltogether.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포럼 안내 및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mailto:atgmail@nate.com)으로 연락 주세요.  
※ 향후 시위 일정으로 포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하기 전에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불편한 진실에 귀 기울이기

어느 조용한 날에 귀 기울여 보세요.  
비정규직 정리해고,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  
미국의 침략 전쟁, 폭격에 멎어가는 심장 소리들  
뜨거운 지구, 가난한 사람들 삶터가 물에 잠기는 소리  
물·전기·가스·철도 사유화, 대재앙으로 가는 열차 소리

사람보다 이윤이 우선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건  
광우병 쇠고기와 의료보험 민영화,  
그리고 무한경쟁의 입시지옥과 비싼 등록금 고지서,

이윤보다 사람이, 경쟁보다 연대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차별이 아니라 존중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 ‘다함께’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아래의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조중동 같은 기성 언론들은 진실을 은폐하려 합니다. 우리가 흠어진 개인이라면 부당한 권력에 맞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이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주간 〈맞불〉을 발간하고,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또한 거리와 대학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대중 행동을 함께하면서, 자본주의가 낳는 온갖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 명박에 맞선 저항이 승리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셔서 여러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보세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에 함께합시다!

##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mailto:atgmail@nate.com) 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 가판에서도 얼마든지 물어 봐 주세요.

웹사이트 : <http://www.alltogether.or.kr>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5(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함께’는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과 2000년 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국제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였던 ‘투장상블’(Tous Ensemble)에서 따온 이름으로, 다양한 운동이 서로 공동행동을 할 필요를 표현한 말입니다.





## 촛불집회와 가두시위에 함께 합시다!

부끄럽게도 저는 [촛불집회에] 주말만 시간을 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25일 (일)이 두 번째 참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생생한 민심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요즘 촛불집회, 거리 시위는 매번 감동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에 할 말이 있어 거리로 나선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학교 급식을 반강제로 먹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 자식들 건강이 염려되는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달려와 정부를 성토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번 주에 장관 고시를 한다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다면, 이제 거리로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모인 사람들의 자연스런 의견이었습니다.

### 거리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탄핵'을 외치며 가두시위를 이끌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미 '귀 막힌 정부 앞에 촛불시위만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 나선 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모인 사람 대부분은 소위 '운동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가정에서 귀하게 자란 평범한 딸, 아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놀라워 하고 대견스러워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로 헌법 조항을 서로 확인하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25일 밤, 제가 거리에서 제 눈으로 본 것이 바로 민주주의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청 앞, 명동, 을지로, 서대문, 신



이명박은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촌 거리를 행진하며 고시 철회, 협상 무효, 이명박 탄핵을 외쳤고, 길 가던 다수의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연호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비를 털어서 산 김밥과 음료수가 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지칠 만하면 누군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힘내자, 힘내자!" 그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함께 "힘내자"를 외치며 다시 힘을 얻어 행진을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인 도심에서는 거리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 함께 또 소리칩니다. "함께 해, 함께 해!"

택시를 타고 가던 한 시민이 즉석에서

택시에서 내려 시위대에 합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큰 힘을 얻은 시위대는 수천 명이 박수와 환호로 그를 맞았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외치는데도 정부는 아직 꿈쩍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참가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촛불이라도 절실합니다. 서울·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은 청계광장으로 나와주세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각 지역 촛불집회에 참석해 주세요. 인터넷에 여론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임은경

## 1인 단식 시위 배성용 씨와의 만남

예정됐던 고시가 연기된 지난 5월 15일, '이명박 탄핵'을 주장하며 8일째 단식 시위를 하던 배성용 씨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갔다. HIV 감염인인 배 씨는 집에도 알려지 않은 채 단식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단식의 이유를 "정부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와 무언가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쓸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무기가 단식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쓰러진다면 국민의 목숨을 쇠고기만도 못하게 보는 정부임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 아닌가" 하고 이야기했다.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정책을 내놓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불안감을 야기해서 국민들을 몽치게 만든다.

서민에게 월 10만~2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나라 전체를 떠나 자신과 직결되는, 우리 집, 가족이 바로 직격탄을 맞는 정책이 줄줄이 나왔다. 민영화 정책이 시행되면 전기세, 물세 내다 굶어죽게 생겼는데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1퍼센트가 아니라 99퍼센트의 정부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달라. 국민과의 대화가 없는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다. 이미 독재 정부일 뿐이다."

끝으로 "비웃는 사람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앉아 있었더니 처음에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 말을 걸고, 팻말을 읽고, 지지하고 했다. 무심한 그들이 같이 손잡고 나오는 날이 올 것이다. 포기하지 말자"는 말을 전했다.

김민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부의 승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을 방해·탄압해 왔다. 투쟁에 나선 조합원들은 해고되거나, 2백여 명이 원거리 발령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결 투쟁으로 맞섰다. 공단 측을 상대로 부당 해고·원거리 인사이동 철회 소송을 걸었으며, 자발적인 성금으로 1천만 원이 넘는 소송 기금도 마련했다. 민주노총 소속 변호사들이 이들을 적극 변호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끈질기게 투쟁한 결과, 결국 법원은 5월 23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해고자들은 해고 기간의 월급을 전부 보전받고 원직복직됐고, 원거리 인사이동도 철회됐다. 또한 법원은



공단이 게시판에 노조 탄압에 대한 '반성문'을 쓰도록 명령했다.

이번 일로 인해 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민주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 아무리 공단 측이 탄압을 해도 단결된 힘으로 이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내가 아는 한 공공노조 조합원은 고려대 학생 출교 철회 투쟁을 거론하

며, "그동안 나만 알고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어느 곳에나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고,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

인간답게 일하고 싶어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단결로 지켜낸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자.

백철

## 이명박 정부의 강제 추방 정책에 맞선 재중 동포들

재중 동포들이 이명박 정부의 '선별 체류비자' 제공 방침에 반발해 싸우고 있다. 법무부는 1992년 한-중 수교 전에 입국한 미등록 재중 동포들 중 소수에게만 5년간 머물 수 있는 체류비자를 주고, 1천여 명을 강제 추방하려 한다. 이미 수교 전 입국자 두 명이 최근 강제 추방됐다. 재중 동포들은 17년 넘게 살아온 땅을 떠나라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크게 분노하며 5월 19일부터 기독교백주년 기념관에서 항의 농성에 들어갔고, 매주 일요일 서울조선족교회 앞마당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재중 동포들은 한-중 수교 전 입국자의 체류 합법화, 방문취업제 입국자의 자유 취업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진희

## 주간 <맞불>을

# 정기구독 하십시오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 조직 노동자들이 나서면 승리할 수 있다

안형우

운수 노동자들의 미친 소 하역·운송 저지 선언은 이명박 반대 투쟁의 희망을 보여 줬다.

자본주의에서 물류는 핏줄과도 같아서 물류가 멈추면 산업이 마비된다.

2003년에 화물연대가 생존권을 요구하며 파업했을 당시 노동자들은 포스코의 정문을 일주일간 틀어막고, 부산의 주요 부두와 주요 물류 시설을 봉쇄했다. 포스코 등은 하루에만 1천5백억 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

결국 화물연대의 강력한 파업은 2주일 만에 거의 모든 요구를 쟁취하고 승리했다. 이번에 운수노조는 이 힘을 광우병 쇠고기를 막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운수 노동자들의 힘은 역사적 사건들에서도 빛을 발했다. 1917년 2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왕정이 폐지됐다. 그러나 5개월 만에 역사를 되돌리려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때 러시아 철도 노동자들은 쿠데타 군이 철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철로를 들어내 바리케이드를 쌓았고 쿠데타 군 사병들에게 이탈을 호소했다. 쿠데타 군은 총 한 방 쏘보지 못하고 공중분해 됐다.

운수 노동자만이 아니라 조직 노동자들이 사회악을 제거하고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한 예는 수없이 많다.

1996년 말에 김영삼이 노동법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안기부(지금의 국정원)법 개악안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을 때, 민주노총은 연인원 3백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총파업으로 이를 개정시키고 김영삼 정권을 시체로 만들어 버렸다.

2006년 프랑스에서 프랑스판 비정규

직 악법인 ‘최초고용계약법’(26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 2년 안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을 때 지금처럼 학생들이 먼저 투쟁에 나섰다. 이에 힘을 얻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조직적으로 시위에 참가하자 결국 프랑스 정부는 이 법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대중적 분노와 행동, 조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결합됐다.

운송 저지 투쟁을 약속한 화물·덤프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물가와 유가는 폭등하는데 화물·덤프 노동자들의 운송료는 10년 전과 똑같다. 그래서 화물·덤프 노동자들의 오래된 구호는 “차라리 죽여라”이다. 그런데 미친 이명박은 다음달부터 기름 값 보조금마저 끊겠다고 한다.

운수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 모든 사람들을 위한 투쟁을 하려 한다. 그렇기에 파렴치한 정부나 조종동이 노동자들을 마녀사냥하고 탄압하려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5월 9일 집회에서도 운수노조 정호희

정책기획실장은 “우리 아이가 [어버 이날] 카네이션을 전해 주면서 이렇게 물어봤다. ‘아빠 또 감옥가는 거냐’ … [그러나]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수송 저지 투쟁을 하겠다” 하고 말했다.

이들을 따라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도 이 싸움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연금삭감, 민영화 등에 시달리는 만큼, 이들 노조도 자신들의 문제를 광우병 수입 저지와 함께 걸고 투쟁한다면 좋을 것이다.

민주노총 이석형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시민들을] 뒤따라가고 있고,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조직적 결의를 통해 “80만 조합원 중 40만이라도 길거리에 나오게 해 국민과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런 결의는 당장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화물연대의 2003년 5월 투쟁처럼 물류 창고를 틀어막고, 도로를 점거하고, 항만을 봉쇄하며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미친 소뿐 아니라 미친 이명박의 ‘리콜’까지 함께 쟁취할 수 있다.

## “우리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으로 앞장서자!”

미친 정부와 미친 소에 맞서 전 국민적 저항이 불길처럼 번져 가고 있다.

기아차 화성공장에서도 21일 최초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캠페인이 시작됐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식당 앞에서 〈맞불〉 정기구독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이 진행한 가판에서 3백30여 명이 미친 소 수입 반대 서명을 했다. 노조 집행부에서 집집마다 ‘우리 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 팸플릿 걸기 운동도 하고 있다.

5월 22일 수원역 촛불집회 때는 노동

조합의 지침에 따라 간부들과 대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했다. 투쟁 조끼를 입고 조직적으로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시민들과 젊은 학생들은 거리낌 없이 박수를 보냈다. 기아차 노조는 24일 청계광장 촛불 집회에도 기아차 노동자들 다수를 조직적으로 참가시켰다.

26일에는 기아차 현장 조직인 ‘금속노동자의 힘’이 앞장서서 ‘미친 소 반대·산별 중앙교섭 쟁취·주간연속 2교대 쟁취’ 등으로 홍보전을 하고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기아·현대차 노동자들과 금속노조·민주노총은 지난 20여 년간 모진 탄압을 이겨내며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지금 그 힘을 보여 줄 때다. 지금 거리로 나선다면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친 정권의 숨통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열쇠는 우리 손에 있다. 지금 파업 등 투쟁에 나서자!

김우용(기아차 소속 금속노조 중앙위원)

## 대학생 동맹휴업도 촛불처럼 번져야 한다

조명훈

청소년들이 불을 붙인 촛불의 바다에 대학생들의 참가가 뚜렷하게 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대 총학생회의 동맹휴업 계획은 고무적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공권력의 부당한 폭력에 반대한다”며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

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및 장관고시 철회’, ‘6월 5일 동맹휴업’을 안건으로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6월 5일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주변 대학들과 함께 신촌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겠다고 했고, 성균관대 총학생회도 5월 29일 교내에서 촛불문화제를 한 뒤 청계광장으로 이동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총련 소속 30여 개 대학 학생회장들은 5월 26일부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한총련은 5월 31일 전국 90여 개 대학이 참가하는 대학생대회에서 동맹휴업, 삭발투쟁 등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 한총련 웹사이트 자유게시판에는

“부활하라, 한총련이여”, “한총련의 대대적인 투쟁의 날을 정해 주십시오” 등등 시급히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는 글들로 넘쳐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같은 동맹휴업 계획을 한대련·한총련 같은 대중적 학생운동 단체에서 좀더 앞장서 제시할 필요도 있다.

한국 학생운동은 1987년 6월 항쟁 등 역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대학생들이 앞장서 미친 이명박 정부를 OUT시킬 때다.